

# ‘만5세 초등입학’ 논란 가열... “격차 해소 필요하나 부작용 우려”

교육부 학제 개편안 발표... “요람부터 국가가 책임”  
학제 “교육 격차 해소 관심 환영...장단점 분석 필요”  
학부모·교원단체 “발달단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조기 사교육·돌봄 문제 제기도...의견 수렴 예정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학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목표로 내세운 ‘국가 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입학 연령을 내리는 방안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되레 아이들과 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이 찬반 양론이 뜨겁다.

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 방안을 확정해 그다음 해부터 입학 시기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9년생을 한꺼번에 입학시킬 경우 공간과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2025학년도에는 만 6세인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생이 입학한다.

이번 학제 개편안의 취지는 가정 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국가가 조기에 책임지고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사회적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을 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라며 “국가가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선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적 자체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어린 시절 주어지는 교육 기회가 차별적이고, 이때 발생한 격차가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서 한 살 일찍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과 유아교육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사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처럼 1학년 앞당기는 방법과 기존의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방법을 두고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K-학년제라고 해서 유치원 과정을 의무학제로 넣는 나라들은 많지만 만 5세를 초등교육 대상으로 보는 나라는 많지 않다. 굳이 초등학교 과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책이 현실화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초등교육 체계가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본래 취지와 달리 사교육에 더 일찍 뛰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교육부 발표 후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발달 시기가 지연돼서 7살에 한글 떼기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입학할 앞당기는 건 무리 같다”, “느린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해결 되는 거냐. 영유아 조기 교육에 열 올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초등 돌봄은 그냥 시간 때우기 수준인데 만 5세를 그런 곳에 맡길 수 있나. 돌봄이 확충되지 않는 한 부모 중 한 명은 퇴사하고 결국 외벌이가 돼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며 돌봄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도 있었다.

유·초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개편된 학제를 거친)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학제 개편 후) 원아 수 급감으로 폐원이 급증하면 유아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아교사의 실직사태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영난을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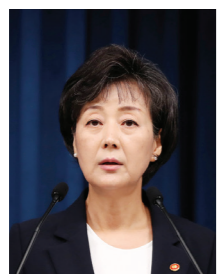
교육부는 사전 준비를 위해 내부에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책 연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힌 상태. 앞으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박순애 교육부장관 “만5세 초등 입학, 왜?...공정한 교육출발 위해서”

입학연령 단축 의도?...박순애 “부차적인 것”

학부모 돌봄공백 우려...“오히려 긍정적 효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을 추진하는 취지는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1일 재차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한국나이 8세)에서 만 5세(7세)로 단축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

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박 부총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입학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 역시 그는 “부차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지적에 박 부총리는 ‘탄

력적 수업’을 거론했다. 박 부총리는 “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벨을 울리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사항을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초등 입학 시기가 단축되면 학부모들이 돌봄 공백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입학시기 단축으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초등 1~2학년에서는 이러한 시설(돌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여건이 된다면 조기 입학을 통해 아이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의 선진국 다수에서 만 5세 입학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나라마다 이 컨디션을 운영하는 형태가 상이하고 어차피 (5~7세가) 전환기적 과정이잖나”라며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환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적응을 잘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만 5세 입학을 하는 나라는 4개국 밖에 없으며, 한국 등 26개국은 만 6세를 입학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에 따라 대학까지 모든 학제의 입학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